

“옵티머스·라임 펀드사기 靑, 檢 수사 적극 협조해야”

靑 “검찰 요청 출입기록 등 제출 CCTV 등 자료는 존속기한 지나”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옵티머스자산 운용·라임자산운용 등 펀드 사기 사건 검찰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어느 곳도 성역 될 수 없다. 빠른 의혹 해소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해당 사건에 전직 청와대 관계자가 연루된 데 만큼 정쟁 수단이 될 것을 우려해 적극적인 협조로 의혹 해소에 나설 것이라는 의지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해 전한 뒤 “청와대는 검찰이 라임 펀드 수사와 관련한 출입기록 등을 요청하면 검토해서 제출할 계획이다. 다만 검찰이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CCTV 자료는 존속기한이 지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앞서 강 대변인은 전날(13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청와대 출입기록 등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해당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지시한 만큼 검찰 요청이 있으면 전향적으로 협조하기로 방침을 바꾸게 됐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원칙적으로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에 따르면 (청와대 출입기록 등은)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돼 있다. 다만 해당 법률 9조 각 호에 보면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상황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며 “(검찰에서 사건 관련 자료를) 요청하면 (청와대에서) 협조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또 야권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자녀에게 보낸 답장과 관련 ‘타이핑한 점’을 문제 삼아 비판하는 데 대해 “대통령 서한은 대통령께서 먼저 육필(자필)로 쓴다. 메모지에 직접 써서 주는 내용을 비서진이 받아 타이핑한 뒤 전자서명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번뿐 아니라 외국 정상에게 보내는 대통령 친서도 마찬가지로 타이핑하고 전자 서명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통령께 오는 외국 정상 친서도 타이핑한 것인데, 이번 아니라 빌게이츠 전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나 그룹 U2 리드보컬 보노가 보낸 편지, 프란치스코 교황의 구두 메시지 서한 역시 타이핑한 것”이라며 “타이핑이 왜 논란이 되어야 하는지 잘 이해 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강 대변인은 연내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와 관련해 “‘만나다’, ‘만나지 않는다’가 양국 간 현안 해결에 전제조건이 돼선 안 된다는 게 우리 정부 입장”이라며 “문제가 있으면 오히려 만나서 풀려고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3국 정상회의의 성사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한-우즈벡, 웨비나서 FTA 경험 등 공유

산업통상자원부는 우즈베키스탄과의 무역협정 협상 추진에 앞서 한국의 FTA 경험을 우즈베키스탄과 나누기 위한 웨비나(webinar)를 14일 개최했다.

이번 웨비나는 우즈베키스탄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산업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우즈베키스탄의 투자대외무역부 공무원, 경제연구소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산업부는 이번 웨비나에서 그간 우리 정부의 FTA 추진 현황과 경제적 성과 등 한국식 FTA 경험과 모델을 공유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우즈

베키스탄 무역협정 공동연구 결과를 토대로 무역협정 추진시 시장개방과 경제협력 확대에 따라 예상되는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설명했다.

한편, 양국은 무역·투자를 호혜적으로 확대하고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우즈베키스탄 무역협정 체결을 추진 중이다.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공동연구를 거쳐, 공청회와 국회보고 등 협상개시를 위한 우리측 국내절차 완료 후 우즈베키스탄과 협상개시를 협의하고 있다. /한용수 기자 hys@

근로복지공-선플재단 ‘선플운동 실천협약’

근로복지공단과 선플재단은 14일 서울합동청사에서 ‘선플운동 실천협약’을 체결했다.

선플이란 ‘善+Reply’의 합성어로 악의적인 댓글인 ‘악플’에 대한 반대어로 선의적인 댓글을 의미한다.

이번 협약은 응원과 배려의 선플 문

화 확산을 통해 상호 존중의 직장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취지다.

양 기관은 ▲선플문화 확산을 통한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상생의 노사문화 조성 ▲사이버 언어폭력 예방과 인터넷 윤리·인권 교육 사업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한용수 기자

“공정경제 3법, 부작용 등 고려를”

공정경제 3법 릴레이 정책간담회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선진경제로 갈 수록 법보다 규범”

유동수 공정경제 3법 TF 단장 “현장목소리 듣고 실무적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감독거래법 제정안)에 대한 재계 반발에 이견 수렴 차원에서 ‘릴레이’ 정책간담회를 갖는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공정거래 3법 처리를 예고한 만큼 재계와 릴레이 간담회로 중재안 마련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은 14일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 등 주요 경제단체와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먼저 민주당 공정거래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대한상의를 찾아 박용만 회장과 만났다. 이날 대한상의와 정책간담회에는 당 공정경제 3법 TF 단장인 유동수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김병욱·백혜련·오기형·홍성국·이용우·송기현 의원 등이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박 회장은 ▲규제 필요성에 대한 검토 ▲규범을 통한 기업 문제 해결 ▲현행안에 대한 부작용 최소화 필요성 등을 제안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이 그동안 어떤 개선 노력을 해왔는지 감안할 때 규제가 필요한지 다시 생각해달라”며 “선진 경제로 갈수록 법보다는 규범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진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공정경제 3법 TF 단장(왼쪽)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공정경제 3법 정책 간담회’에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 단장은 박 회장 요청에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현장에서 발견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들도 충분히 고민을 하겠다”며 “TF팀 구성 자체가 굉장히 실무적으로 이뤄졌다. 실무적인 논의를 하고 당 지도부에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화답했다.

당 공정경제 3법 TF는 이날 오후 경총을 찾아 손경식 회장과 만났다. 이 자리에는 중기중앙회, 중견련,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재계 측 관계자도 함께한다. 이 자리에서 재계 측은 공정경제 3법과 관련한 우려에 대해 전달할 예정이다. 이에 민주당은 우려 사항에 대해 경청하고, 필요할 경우 중재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릴레이 정책간담회에서는 공정경제 3법 가운데 상법 개정안에 있는 ‘3%룰’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이나 공정거래위 전속고발제 폐지,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집단소송제 대상 확대 등 보다 ‘3%룰’에 대한 재계 우려가 더 크

기 때문이다. ‘3%룰’은 이사회 감사위원을 다른 이사와 분리 선임하고, 선임 시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합산 의결권도 3%로 제한하도록 한 규칙이다. 재계는 ‘3%룰’ 도입 시 대주주 의결권이 크게 제한돼 외국계 헤지펀드의 사냥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반발하고 있다.

이 밖에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도 오는 15일 삼성·현대·LG·SK 등 주요 대기업 연구소 관계자를 만난다. 이 자리에서 민주연구원과 주요 대기업 연구소는 공정경제 3법 관련 주요 쟁점 및 건의 사항 등에 대해 각각 발표하고 토론할 예정이다.

민주연구원은 향후 일련의 경청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주요 사례 중심으로 ‘공정경제 3법 시뮬레이션’ 면밀히 검토하고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홍익표 민주연구원장은 “앞으로도 주요 기업 싱크탱크 등 경제계와 논의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며 “시민단체 및 학계 등의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韓 표고버섯, 중동국가 식탁에 오른다

산림청, 밀키트업체 ‘헬로우셰프’에 표고버섯 활용 한식요리 2종 론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전세계에 언택트 식문화가 확산 중인 가운데 한국산 표고버섯이 중동 HMR(가정간편식)시장에 최초로 진출했다.

산림청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오는 15일부터 중동 최대 밀키트업체 ‘헬로우셰프’에서 한국산 표고버섯을 활용한 한식요리 2종류를 론칭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론칭된 한식요리는 비빔밥과 불고기덮밥이며, 각각의 레시피 동영상은 15일과 22일에 나눠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헬로우셰프 공식 SNS를 통해 공개한다. 또한, 한국산 버섯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 11월에는 현지 대형 유통매장과 연계한 판촉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aT는 한국 버섯의 불모지인 중동 진출을 위해 타국산 버섯 진출현황 및 한국산 수출유망 버섯 시장조사, 버섯 전문 수입바이어 발굴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한국 표고버섯의 고유한 향을 낮설어하는 바이어를 지속 설득하며 품질의 우수함을 인정받아 결국 밀키트시장에 진출하는 성과를



한국산 표고버섯 활용 밀키트 레시피 동영상 화면. /aT

거뒀다. 한편, ‘헬로우셰프’는 전세계 유명 요리들의 레시피를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각 가정에서 직접 요리를 할 수 있도록 손질된 재료를 배달해주는 프리미엄 밀키트 전문 업체다. 이번 한국 표고버섯 활용 한식요리 론칭을 계기로 다른 메뉴의 버섯 식재료도 한국산으로 지속적으로 대체해나갈 계획이다.

aT 신현근 식품수출이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규모가 급성장 중인 HMR시장에 K-FOOD의 진출이 필요하다”며 “이번 중동시장 진출을 계기로 우리 인산물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 기자

대학생 현장실습 지원비 최저임금 75% 이상 지급

교육부, 실습제도 개선방안 발표

그동안 ‘열정페이’ 논란이 불거졌던 대학생 현장실습시 최저임금의 75% 이상을 실습지원비로 지급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고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를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구분해 체계를 확립하고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운영 기준과 절차 등을 표준화해 운영토록 했다.

특히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기존 대학과 실습기관이 자율적으로 협의해 실습지원비를 정했으나, 최저임금의 75% 이상을 실습기관이 지급하도록 지급기준을 마련했다.

대학의 장이 책임지고 운영하는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에도 직무가 부여되는 경우 유급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 목적 등에 따른 실습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실습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단순·반복적인 일상 업무를 부여하지 않는 등 엄격한 요건 하에 무급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한용수 기자